

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 제안

- 2026년 4월 25일, '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' 속의 마당 결과

1. 법과 제도: 권리와 안전의 기반을 만들어라

- 차별금지법 제정 - 혐오·배제 행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법적 기반 마련
- 온라인 혐오 표현 및 허위정보 규제 법제화
-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조례 제정
- 시도별·전국 단위 민주시민교육 독립 지원기관 설치
- 교사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 -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정치교육 가이드라인 병행 마련
- 교사가 사회 현안과 논쟁적 쟁점을 수업에서 다룰 때 외부 압력과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
- 교사회의 법제화, 교원 자치 보장, 승진제도 개선 등 학교 체제 민주화
- 교원 간 수평적 관계를 제도화하여 학교 민주주의의 실질적 토대 마련
-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국가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기준 마련
- 진보와 보수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공통 원칙 마련
- 사학 지배구조 개혁, 관료적 교육행정 혁신 등 학교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구조 개선

2. 교육과정 : 민주주의를 일상으로 녹여내라

- 학교를 대학 입시 준비 기관이 아니라,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삶의 공간으로 재정립
- 민주시민교육 중심 교육과정 전면 개정 및 범교과 통합
- 교사 교육과정 재량권 확대 - 사회 현안과 논쟁적 쟁점을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자율성 보장
- 민주시민교육을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투표, 청원, 집회 등 사회참여 경험과 연결
- 지방의회 참관, 지역사회 토론, 학생 참여 예산제 등 지역사회 시민으로 참여하는 기회 보장
- 혐오 대응을 넘어 인간 존엄과 공동체 가치를 발달단계에 맞게 가르치는 교육과정 설계
- 형식적 이수 중심 인권교육을 넘어 감수성, 대면 접촉, 토론과 성찰이 살아 있는 교육으로 개선
- 정치교육을 특정 이념 교육이 아니라, 공동체 속에서 말하고 듣고 조율하며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일상의 기술을 배우는 교육으로 정립

3. 교원 역량: 교사 혼자 감당하게 하지 말라

- 교원 양성과정부터 현직 연수까지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체계 마련
- 민주시민교육을 법정 연수나 의무 계기수업처럼 교사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 지양

- 교사 수업 부담 완화 -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간적·제도적 여건 확보
- 사회 현안과 논쟁적 쟁점을 다루는 수업을 지원할 교육자료, 사례, 공동 수업 모델 개발
- 민원과 정치적 편향 논란에 교사 개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학교·교육청 차원의 공식 대응 체계 마련
- 교육 책임의 공동체화 - 지역정치아카데미, 시민교육 지원기관, 교육청 지원단 등 공동체적 지원 구조 마련
- 교사·학생·학부모·시민이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

4. 혐오와 극단화 대응: 외면하지 말고 교육으로 다루라

- 혐오·차별 표현을 주제로 한 학내 대토론회 등 공론장 조성
- 극우 영상·혐오 밈·허위정보 등을 수업 안으로 끌어와 비판적으로 다루기
- 허위정보와 혐오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
-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치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아 온라인 음지에 머무는 혐오와 극단화를 공론장에서 다루기
- 혐오 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표현 문화 함께 만들기
- 혐오문화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·학생 보호 제도 마련
- 혐오와 차별을 단순히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, 인간 존엄과 평등의 감각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
- 불편한 주제라도 학생·교사·학부모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

5. 학생 자치와 참여: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살아보게 하라

- 학생 자치 시간 확보 및 소통 채널 다양화, 실질적 숙의 과정 운영
- 교칙 제정, 학급 운영, 학교생활 규칙 논의 등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
-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반영되는 경험을 일상에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마련
- 학생 참여 예산제, 지방의회 참관,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등 학교 밖 민주주의 경험 확대
- 일회성 강의식 인권교육 개선 - 감수성 기반 접근과 충분한 대면 시간 확보
- 학생·교사·학부모 3주체 역할 재정립 및 불편한 주제에 대한 공동 토론 문화 형성
- 경쟁이 아닌 연대와 돌봄의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
- 학생들이 말하기, 듣기, 토론하기, 조율하기, 합의하기를 실제로 경험하는 학교문화 조성
- 학교 안 자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, 학생의 삶과 학교 운영을 바꾸는 실질적 권한으로 작동하도록 보장

■ 학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면, 학교 자체가 먼저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.